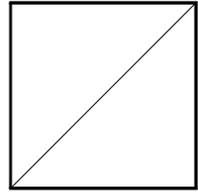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1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2. 5. 11. (제 9 차)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심사 결과 보고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2. 5. 11.

## 1. 보고주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심사 결과를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 2. 보고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바, 그 등록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임

## 3. 주요골자

심사 결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회사가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붙임> 참조

나. 협약서 제출 배경 및 주요 내용 : 별도 첨부

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검토내용 : 별도 첨부

라. 제9차 안검검토 소위원회(2022.5.6.) 보고

# 관계 법규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 가. 최대주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나. 주요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2)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임원이 제6조제1항에 적합할 것
  6.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제18조의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7.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 후단의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부칙 제4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는 날까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특례)** 이 법 공포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을 영위하는 자는 제5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7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등록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대출(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2.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10억원
3. 연계대출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0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연계대출 규모는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누적 연계 대출 금액 중 상환된 금액을 제외하는 등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관한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④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립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
2. 이용자 보호에 적합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3.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⑤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하게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⑥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자기자본 및 출자총액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⑧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본문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4. 금융관계법률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부터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가.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나.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다.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5. 그 밖에 사회적 신용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서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대출 규모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주주”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법 제18조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하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 수를 적은 서류
  8. 대주주가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검토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4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칙 제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따른 직전 연도 말 기준 연계대출 규모를 기준으로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자는 그와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적 동일인”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동일인도 제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만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등록할 수 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관련 요건(제3조제6항 관련)

구분	요건
<p>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다.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단(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마. 다음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위반 등의</p>

	<p>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본문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li> <li>3)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li> <li>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li> </ol>
<p>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의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제1호나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p>	<p>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나. 제1호나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4.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 및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라.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p>	<p>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p>

	<p>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에 따른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제4호나목·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	---

<비고>

1. 제3조제5항 각 호의 자가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4호다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등록하려는 날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외국법인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이 등록신청시 지정하는 회사(해당 외국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외국법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해당 외국법인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사를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위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로 정할 수 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 제4조(등록요건)**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계대출 규모는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말 기준 누적 연계대출 금액에서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차입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여 손실이 확정된 금액(그 손실이 확정됨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이 상쇄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제외한 연계대출 잔액으로 산정한다.
- ② 영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③ 영 제3조제6항 및 영 별표 1에 따른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④ 영 제3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0을 말한다.
- ⑤ 영 제3조제8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연체 상태(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연체율(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연계대출 잔액을 총 연계대출 잔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⑥ 제5항의 연체 상태에 있는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 평가, 연체율의 산정 및 관리방안 마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등록의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영 제4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첨부서류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등록번호 및 등록일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상호
3. 대표자의 성명
4. 등록 내용

**부칙 제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096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신청인"이라 한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대부를 받으려는 자와 자금제공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인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인정되는 자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신청인이 대부를 받으려는 자와 자금제공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신청인으로부터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를 받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신청인에게 사실상 지배를 받는다고 인정되는 자(다만, 영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은 제외한다)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인력, 물적설비 및 사업계획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해, 다음의 요건을 갖춘 2명 이상의 전산전문인력(IT 기획·개발·운영·정보보호 등 전산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자)을 확보할 것. 다만, 전산설비를 종합 위탁한 경우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 (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전산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말한다)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다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동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

####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3)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 시스템 관리방안이 확보되어 있을 것

- (4)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 (5)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1)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 (2) 물적 설비에 대하여 충분한 소유권을 보유하여,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 다. 보안설비
    -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 (1)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3. 사업계획
- 가.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 보호
- (1) 경영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이용자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 (2)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3) 경영진·이사회 또는 주요 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나.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준수
-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 영 및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부합할 것
  - (2) 이사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 영 및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2]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요 건
<p>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 1 제1호 관련)</p>	<p>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등록 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p> <p>나. 대주주의 출자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그 경제적 실질이 부채성 조달자금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p> <p>다.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li> <li>2)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해당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li> </ol> <p>라.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p>

	<p>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등록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p> <p>마.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본문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li> <li>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li> <li>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li> </ol> </li> </ol>
<p>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이외의 내국법인[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의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영 별표1 제2호 관련)</p>	<p>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p> <p>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p> <p>라. 제1호마목1)·2)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li> <li>2) 제1호마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li> </ol>
<p>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영 별표1 제3호 관련)</p>	<p>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나. 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1호마목1)·2)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li> </ol>

	<p>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p> <p>3)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p> <p>4) 제1호(마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p>
<p>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1 제4호 관련)</p>	<p>가.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 및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라. 제1호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5. 대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영 별표1 제5호 관련)</p>	<p>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p> <p>가.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3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외국법인인 경우: 제2호 나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비고**

1. 위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 표의 요건을 다음의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 마목의 요건
  - 나.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 라목의 요건
  - 다. 개인인 경우: 제3호 가목 및 다목의 요건
  - 라. 외국법인인 경우: 제4호 다목 및 라목의 요건
  -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제5호의 요건
2. 위 표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위 표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나.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

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사유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시의 대주주(당해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당사회사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주주인 경우에 한한다)의 요건
- 가. 대주주가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제1호마목1)과 관련한 요건. 이 경우 제1호마목1)의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로 본다.
- 나. 대주주가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 표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제4호다목과 관련한 요건. 이 경우 제4호다목은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본다.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라목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라목 전단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 회사를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나.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 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준법감시인이 된 사람이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은행”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1. 은행: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인
2.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 삭제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혁신과	저축은행감독국
연 락 처	02-2100-2530	02-3145-6770